‘고성·파행’ 구태 얼룩…쌀 직불금 최대 성과

■18대 국회 첫 국감 무얼 남겼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5일 각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뒤 처음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실정론’과 ‘이명박 정부 6개월 평가’라는 여야간 엇갈린 타깃 속에 정쟁으로 얼룩,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났다는 평이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건전한 견제 및 정책토론의 장이어야 할 국감 본연의 기능이 실종된 채 ‘네거티브 국감’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장악 논란과 경제 위기, 멜라민 파동, 그리고 뒤이은 쌀 직불금 파문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정책 이슈는 이렇다할 빛을 발하지 못했고 패기의 초선의원과 군계일학의 국감 스타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는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상임위 배분이 늦어지면서 ‘부실감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20일 만에 47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한계로 인해 ‘맹탕 감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지식경제위 국감에서의 피감기관 임원 난동사태를 비롯,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진 구태도 또다시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이라는 프리미엄과 172석이라는 과반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제1야당으로서 첫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은 ‘야성’(野性)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 당시 감사원이 참여정부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참여정부 실정을 드러내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과 쌀 직불금 파문의 여파로 당초 국감 목표로 내세웠던 ‘좌파정권 10년의 적폐 파헤치기’ 달성에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자평도 있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파문을 나름대로 주도하며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는 등 쟁점 이슈별로 나름대로 전선을 형성,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상당수 상임위에서 이렇다할 이슈를 끌어내지 못했고 국감 스타 배출에도 실패하는 등 수적 열세의 한계 속에 전투력 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자성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원래 국감은 ‘야당의 장’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수적 한계 등으로 인해 치열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정보기관의 국감 사찰과 언론장악 문제 이슈화 등 일부 쟁점 상임위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분위기여서 국감이 내실있는 행정부 견제의 장으로 환골탈태할지 여부는 그 ‘공’이 결국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답변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원장(오른쪽부터)이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일만에 478개 기관 다뤄 ‘맹탕감사’ 비난

與野 이념대결 등 정쟁 몰두 ‘초라한 성적표’

“검찰 사정라인, TK 독식”

민주 이춘석 의원…검사장 승진자에도 4명 포함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의 지역 편중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지난 3월 검찰 인사에서 11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TK(대구·경북) 출신이 4명 포함돼 특정지역 인사들이 대약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1·3차장 등 사정라인을 TK 출신이 지배하고 있는데 특정 학교나 지역 출신이 독식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고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 능력과 품성, 조직내 신망도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려운 지적이며 지역별로 숫자가 골고루 안배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TK 사정라인 독식이 참여정부 사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압박하자 김 장관은 “그런 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연합뉴스

“호남화력, 황산화물 배출 전국 최고 수준”

국감브리핑

■지경위 주승용 의원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의 호남화력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전국 발전소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23일 배포한 한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화력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배출 농도는 148ppm,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207ppm으로 광양만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하동화력의 배출 농도(황산화물 30ppm, 질소산화물 56ppm)의 4~5배나 됐다.

더욱이 남부발전의 하동화력 등 4개 화력발전소가 지역발전을 위해 내놓은 기금은 지난 2005년부터 올 9월말 현재 34억8천8백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호남화력은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남부발전의 하동화력은 18억9천57만5천원, 남동발전의 영흥화력은 3천2백97만8천원,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은 1억9천8백82만1천원, 중부발전 보령화력은 13억6천575만4천원을 각각 지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택보증 민영화 정책은 ‘졸속 행정’ 표본”

■국토위 이용섭 의원

참여정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23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영화 등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일련의 정책을 예로 들며 ‘근시안적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대한주택보증은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커 민영화 추진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제시를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때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 대상기관에 포함, 성과에 집착한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에 2조원을 배정하면 남는 가용자금은 1조8천억원으로, 이는 시공순위 100위 안의 업체가 시행하는 5개 아파트단지 사업(2만4천 세대)를 보증하면 소진되는 금액이다”며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 시행 후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는 기존사업에 차질을 빚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역경제권 정책 전면 철회…재검토해야”

■정무위 김동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을 상대로 “20년에 걸친 수도권 개발정책은 결국 인구분산, 주거환경 개선, 집값 안정의 실패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총체적 실패를 가져왔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은 정책 기저를 ‘균형’에서 ‘경쟁’으로 바꾸고 전 국토를 시장친화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